

# 공화당 Trifecta의 정책방향과 산업 영향 전망

EY한영 산업연구원

Dec 2024

Insight Report #24-048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 Contents



## 1 Republican Trifecta에 따른 정책 추진 동력 획득

---

## 2 Trifecta 하에서의 정책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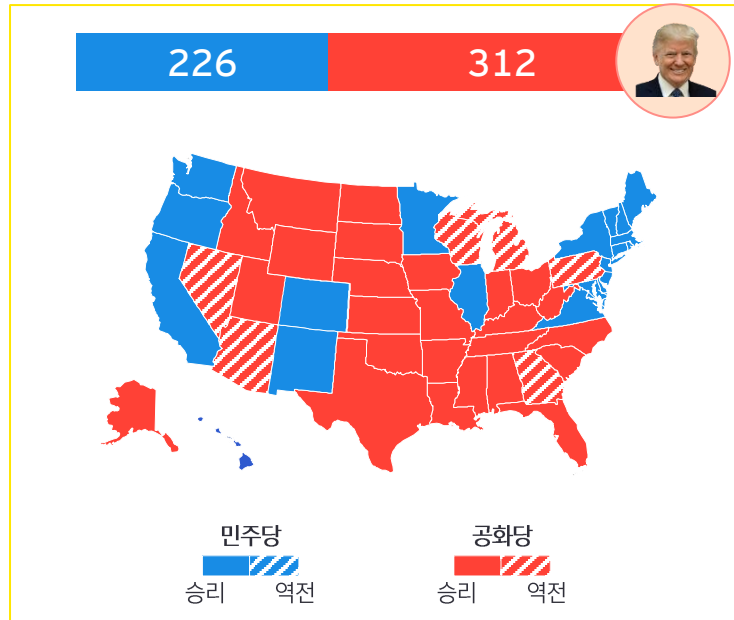
## 3 산업계 영향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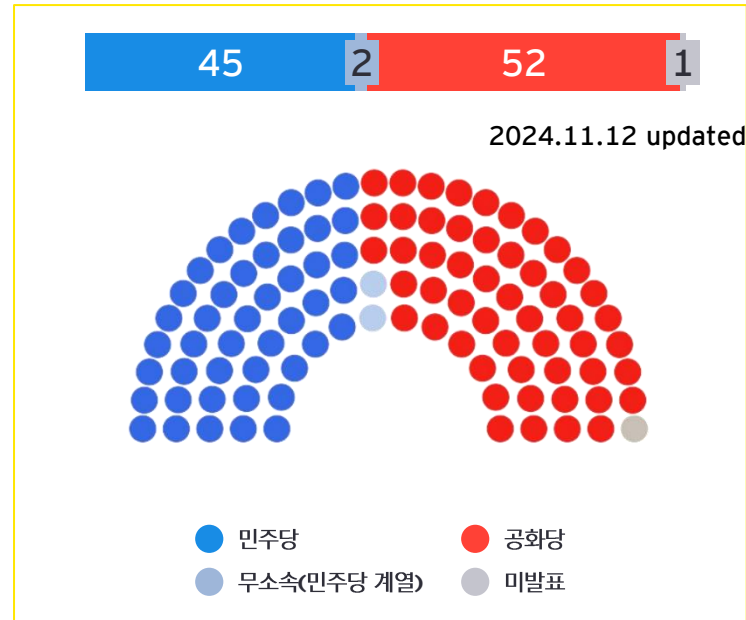
## 4 주요 국가별 반응 및 대응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 승리 뿐만 아니라 의회 선거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며 Red Sweep<sup>2)</sup>으로 Trifecta를 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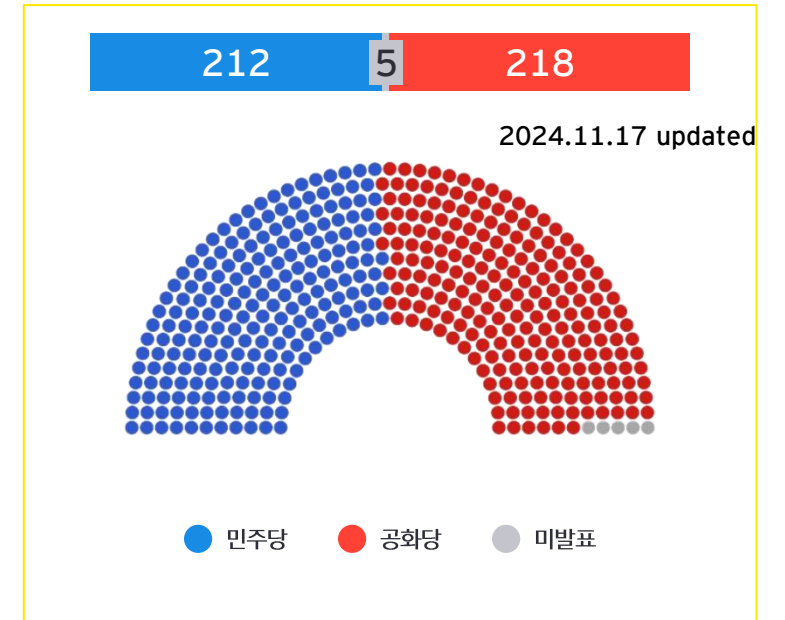
대통령 선거 결과



상원 의원 선거 결과



하원 의원 선거 결과



## 대통령 선거 완승을 거둔 공화당

선거인단 확보 뿐만 아니라 전체 투표 수 측면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해리스를 압도하여, '16년, '20년 선거 결과를 상회하는 완승을 이루어 냄

## 상원·하원 의원 수 과반 확보

상하원 선거 측면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을 달성하여 행정과 입법 두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

1) 특정 정당이 정부의 세 주요 권력(행정부, 상원, 하원)을 동시에 장악하는 상태를 뜻함, 2) 빨강을 상징색으로 하는 공화당이 과반 다수당이 된 상태

Sources: EY Analysis, BBC Korea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6년 중간선거 이전에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추진 동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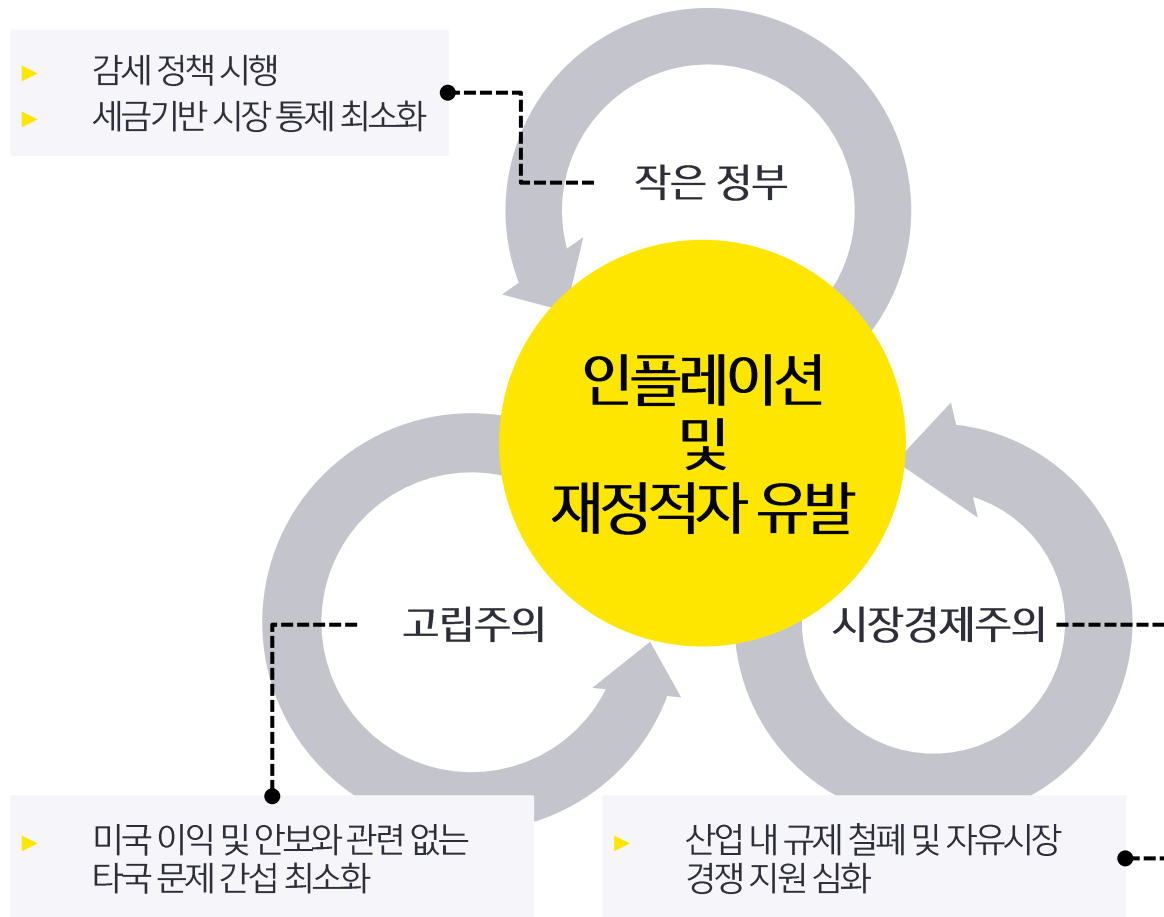
- ▶ 트럼프 주요 정책에 의회의 견제를 최소화한 채로 즉각 시행 가능
  - ▶ 특히, 관세 부과/이민법 집행/연방기관개편 등 의회 승인 없이 추진이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방해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연방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과 같이 행정명령으로 처리가 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추진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 세제 개편, 예산 관련 정책 처리에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는 과정 또한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 연방 법원 판사 인준 절차 또한 빨라질 것이며, 보수 성향의 법관을 임명하여 행정 및 입법 뿐 아니라 사법부 영향력도 강화될 전망

### 정책추진 애로사항

- ▶ 상원 53석으로 과반을 확보하였으나, 법안 통과에 60표 이상 필요
  - ▶ 본래 법안 통과는 과반수로 충분하나, 필리버스터로 인한 무기한 법안 통과 지연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과반 필요
- ▶ 하원의 경우 근소한 과반으로 인해, 정책 추진력이 제한적
- ▶ 공화당 내 극우파와 온건파 간 이견으로 주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잡음 발생 가능성 존재



- '작은 정부, 고립주의, 시장경제주의'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정책들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에 인플레이션 억제 및 재정정보전을 위한 정책도 여러 분야에 함께 포함되어 있음



## 인플레이션 및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주요 정책

###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 예시

건설 규제 완화, 주택 공급 증가 및 주거비 완화

기업 규제 완화, 기업 생산성 향상 (단위당 생산비용 감소)

O&G 에너지 증가, 연료 가격 안정화 (시추규제 완화)

### 재정적자 완화 정책 예시

IRA 폐지 등 재정적자 감소 추진

고관세 정책 등 무역적자 개선 및 세수 확보

연방 공무원 감축, 환경 지출 삭감 등 정부 지출 축소

# Contents



## 1 Republican Trifecta에 따른 정책 추진 동력 획득

---

## 2 Trifecta 하에서의 정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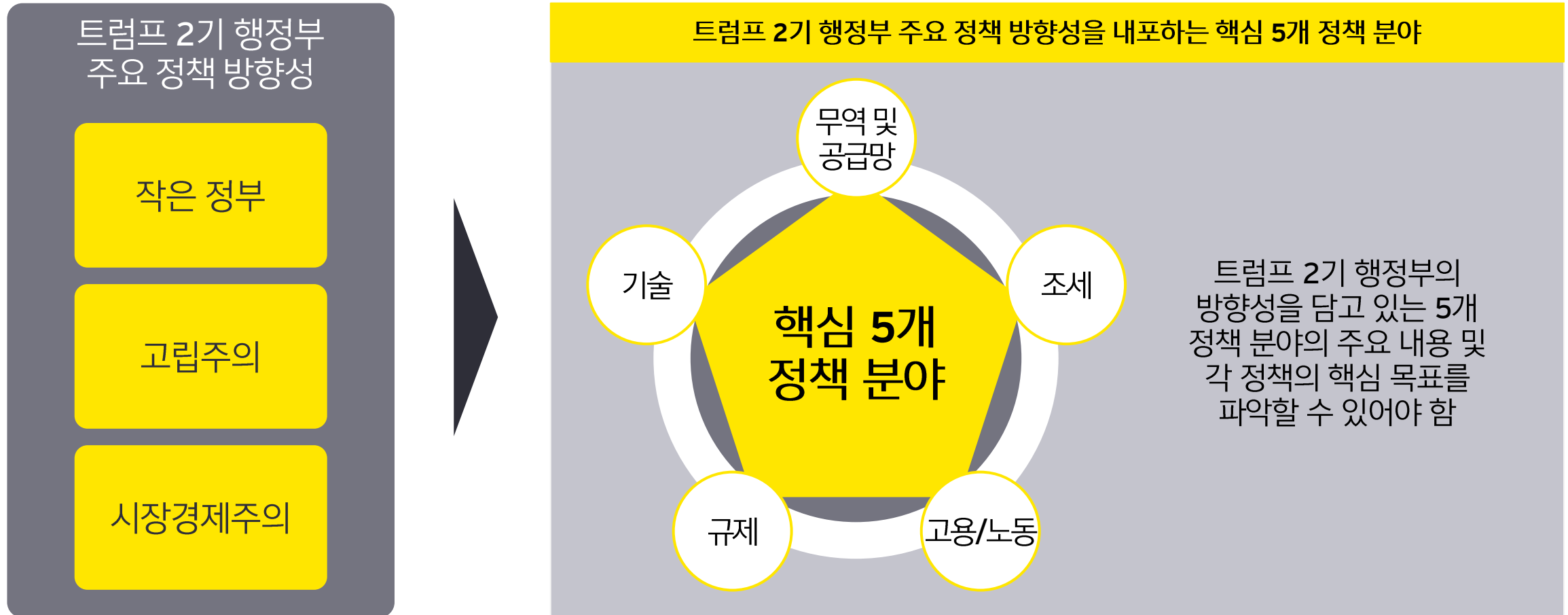
---

## 3 산업계 영향 전망

---

## 4 주요 국가별 반응 및 대응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성은 무역 및 공급망, 기술, 조세, 규제 및 고용/노동 5개의 핵심 분야에 내포되어 영향을 행사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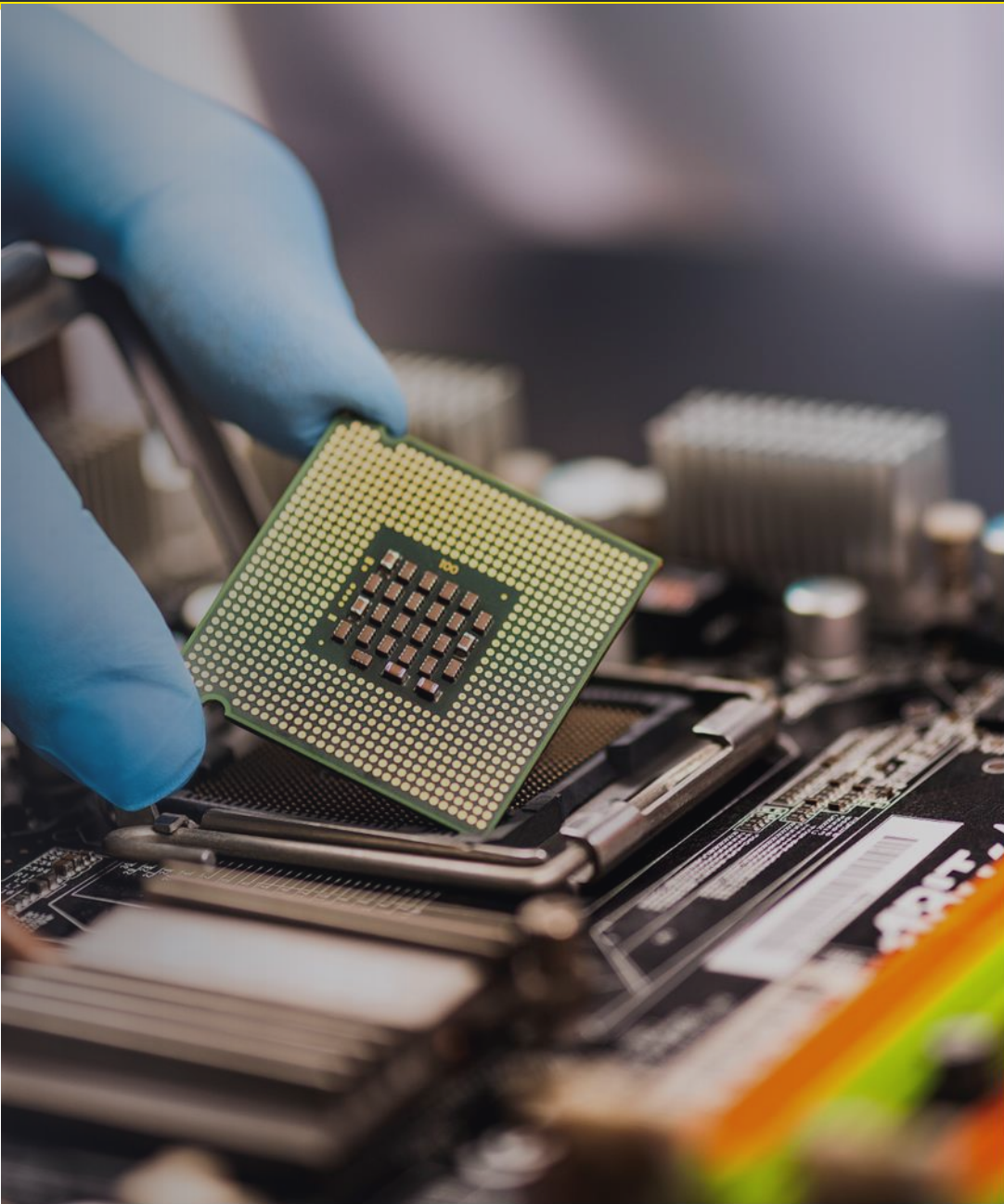
## 무역 및 공급망

### 관련 주요 정책

- ▶ **USMCA**, 북미지역 무역협정 재협상 예정
  - ▶ USMCA 재검토 시 자동차, 철강, 원산지 규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
  - ▶ 한미FTA 등의 무역협정 또한 재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 ▶ 중국의 최혜국대우 지위(MFN) 박탈 검토
- ▶ 중국산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의 단계적 수입 중단 추진 예정
- ▶ 수입품 검사 및 통관 절차 강화 예정

### 예상 효과

- ▶ USMCA 재검토 시, 원산지 규정이 엄격해짐에 따라 **Buy America** 확대 및 미국 외 저임금 노동 활용 제한될 가능성 높음
  - ▶ 멕시코 및 캐나다를 통해 북미에 진출한 기업들의 불확실성 또한 증대
- ▶ 중국을 향한 무역규제의 결과, 중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것이며, 중국 내 경제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
- ▶ 중국산 필수품(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에 대한 의존도 감소는 미국 내 대체 공급망의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함



## 기술

### 관련 주요 정책

- ▶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효되었던 **AI 행정명령 폐지** 예정
  - ▶ 미국 내 AI 개발 관련 민간대상 규제 대폭 완화
- ▶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 약화 예상
- ▶ **CHIPS Act(반도체지원법)** 정책 수정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전망
- ▶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이전을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중국과의 기술 디커플링 가속화

### 예상 효과

- ▶ AI 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들이 자율성이 증대될 것이며, 민간 부분 중심의 AI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 빅테크 반독점 소송 약화로 기업의 인수합병은 더욱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
- ▶ 반도체 산업의 리쇼어링 가속화되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 증가 전망
- ▶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이 제한되고, 미국 - 동맹국간 기술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임





## 조세

### 관련 주요 정책

- ▶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기본 관세** 부과 예정이며, 일부 국가들에 한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관세 부과 예정
  - ▶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고관세율 적용 예정
  - ▶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 계획
- ▶ 멕시코 내에서 생산되는 중국 업체의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 부과 예정
- ▶ 국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미국 기업 제품에 **100-200% 관세** 부과

### 예상 효과

- ▶ 전체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高
  - ▶ 가구 당 연간 1,700-2,350USD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발생 전망
- ▶ 멕시코 및 캐나다 대상 관세 부과로, 북미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재편될 것이며 자동차 부품 및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미국 내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리쇼어링이 증가할 것이며, 전반적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될 것임



## 규제

### 관련 주요 정책

- ▶ **[환경규제 완화]** 기후변화대응 정책 전면 재검토 예정
  - ▶ 환경보호청(EPA) 예산 및 권한 대폭 축소
  - ▶ 화석연료 개발 관련 규제 철폐
- ▶ **[금융규제 완화]** 증권거래위원회(SEC) 관련 규제 완화 방안
  - ▶ 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 폐지
  - ▶ 암호화폐 관련 최소한의 규제만을 유지

### 예상 효과

-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포기로 인해 산업계 부담 감소 예정
- ▶ 발전소 배출기준과 메탄규제 완화로 화석연료 산업은 성장할 수 있으나, 환경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친환경 제품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 전망
- ▶ 청정에너지 보조금 철회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약 30% 감소 전망
- ▶ ESG 투자 트렌드가 약화되어 글로벌 자본 흐름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 ▶ 투자자들의 기업 평가 기준 및 자본조달 환경 변화
- ▶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 상승, 가상자산 세수 증가 전망

## 고용·노동

### 관련 주요 정책

- ▶ 취업비자(H-1B) 비자 발급 제한 및 심사 강화 예정
  - ▶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대상 취업허가 프로그램 (H-4 EAD) 축소
  - ▶ 고임금 직종 중심의 비자 할당 시스템 도입
- ▶ 이민자 채용 사업장에 대한 감사(I-9 감사) 강화
  - ▶ 이민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예정
-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의무 완화 및 사용자 권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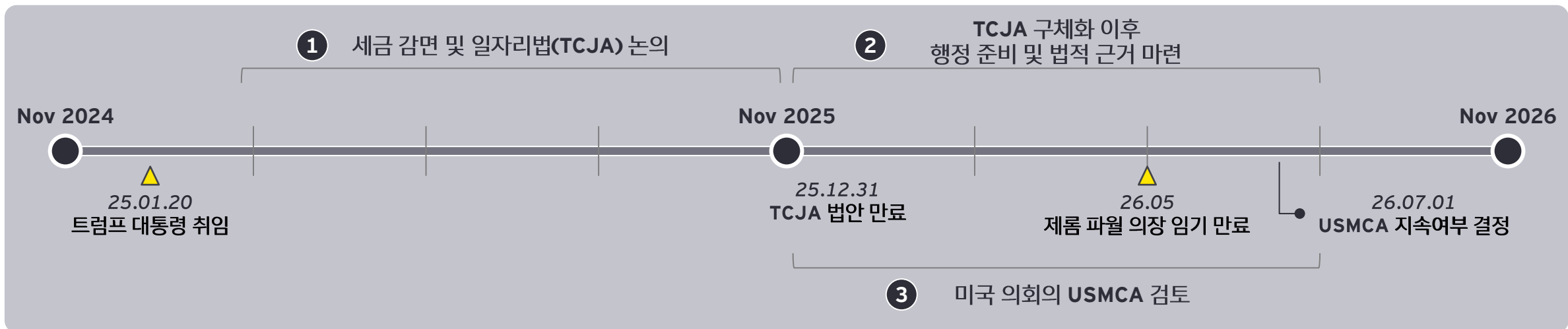
### 예상 효과

- ▶ H-1B 비자 제한으로 과학기술(STEM) 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될 예정이며, 특히 스타트업 및 초기 단계의 인재 채용 애로사항 심화 전망
  - ▶ 전문인력 신입채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산업 전반의 인력 구조가 변화될 것이며, 임금 인플레이션 압박 증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전망
- ▶ 연간 12,000건 수준으로 사업장에 대한 불법 체류자 감사 증가 전망
  - ▶ 건설업, 농업, 숙박업 등 이민자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의 운영 차질 예상
- ▶ 親기업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규제 부담이 감소하고 인력 운영 유연성 증가 예정

# [Back-up] 미국 TCJA 및 USMCA 예상 Timeline

Trifecta 하에서의 정책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TCJA<sup>1)</sup> 논의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26년 이후에 법안 구체화, 관련 제반사항 마련 및 USMCA 검토가 수행될 것으로 전망됨



1

##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CJA) 논의

- ▶ '25년 말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과 관련한 상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 트럼프 당선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관세 정책 또한 본 세제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될 가능성이 높음

2

## TCJA 구체화 이후 행정 준비 및 법적 근거 마련

- ▶ 세제 개혁을 포함한 관세 부과 내용의 구체화 이후, '26년 상반기는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준비 및 법적 근거 마련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됨
- ▶ 제반사항 준비 및 근거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관세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는 '26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함

3

## 미국 의회의 USMCA 검토

- ▶ USMCA는 '26년에 공식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트럼프 당선인은 USMCA의 재협상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음
- ▶ 중국의 우회수출 차단은 물론, 원산지 규제/디지털 무역 규제 등 북미 공급망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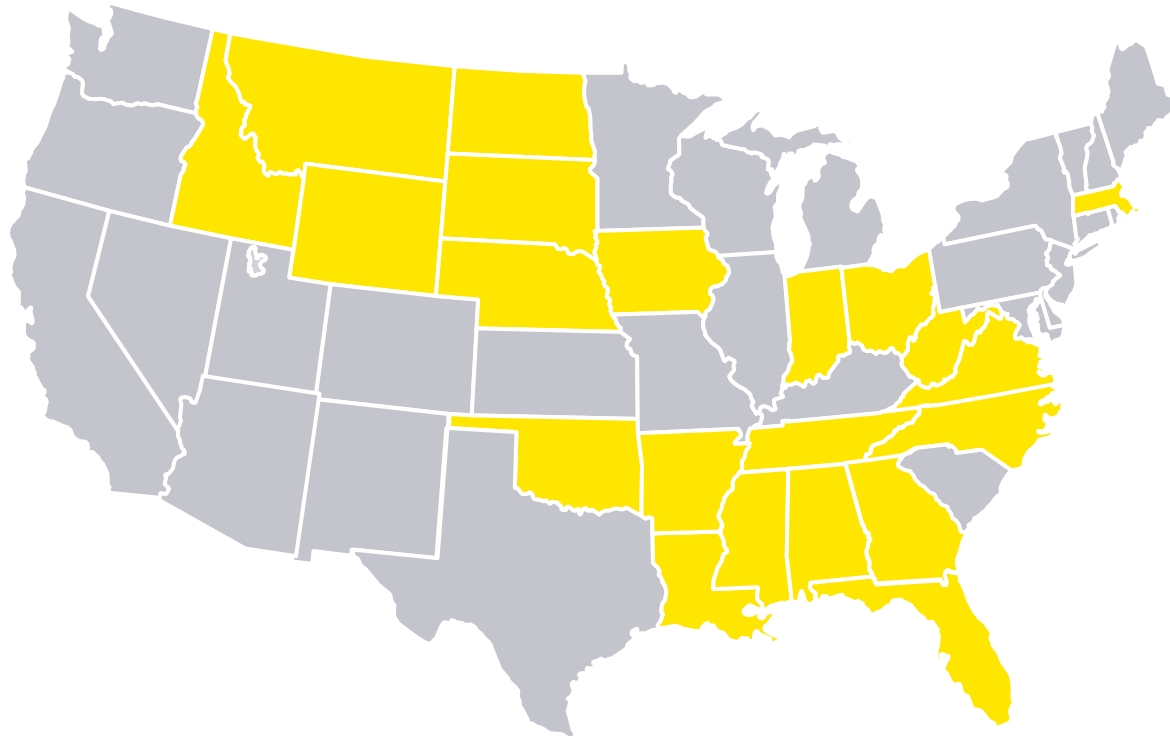
1) Tax Cuts and Jobs Act;  
Source: EY Analysis




중국을 포함한 해외우려국 FEOC<sup>1)</sup>들의 직간접적인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중국의 미국 투자를 강력하게 제재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관련 법안을 제정한 주

(‘23년 1월~‘24년 7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nforming the legislative debate since 1914

**Legal Sidebar**

- ▶ 일부 주에서는 미국 내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거나,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정보 수집 법안을 제정
- ▶ 특정류의 토지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며, 이미 해당류의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
  - ▶ 농업용 토지
  - ▶ 군사 기지, 중요 인프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 근처의 토지
  - ▶ 주 내의 모든 부동산
- ▶ 대다수의 주에서 **FEOC** 소유 또는 **FEOC**가 소수 지분을 보유 중인 **합작투자 기업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FEOC(Foreign Entity of Concern)는 미국 에너지부가선정한해외우려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받거나 관할 또는 지시 대상이 되는 해외단체를 의미함

Source: EY Analysis

# Contents



## 1 Republican Trifecta에 따른 정책 추진 동력 획득

---

## 2 Trifecta 하에서의 정책 전망

---

## 3 산업계 영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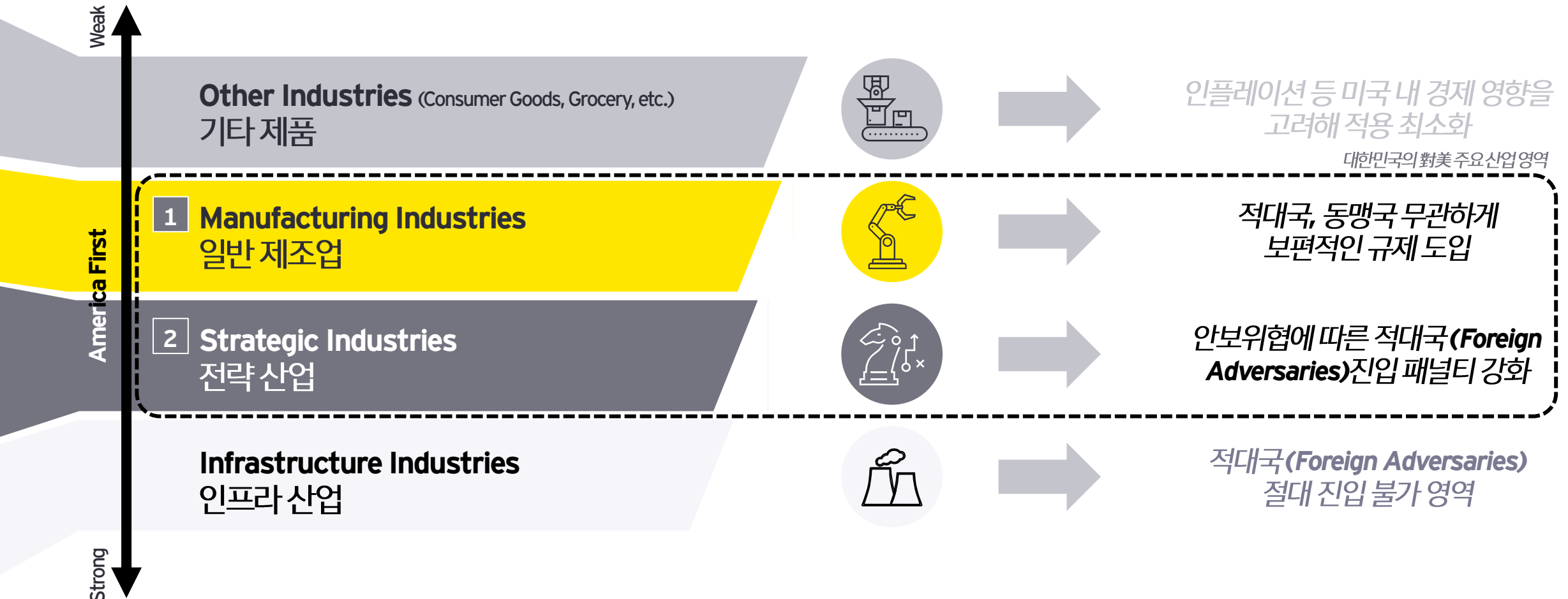
---

## 4 주요 국가별 반응 및 대응

# America First 영향에 따른 EY 관점 산업 구분

산업계 영향 전망

Trifecta의 America First 방향성은, 미국 산업의 기간인 인프라, 미국 안보에 치명적인 5대 전략산업, 일반 제조업 및 기타 산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Sources: EY Analysis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유도하고 타국에서의 생산을 견제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시행 될 경우, 일반제조업 주요 산업군들에 대해서는 적대국 및 동맹국 모두에게 제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내 생산기업 우대 정책

미국 내 제조업체 대상 법인세율 인하(21% → 15%)

국내 생산활동 공제(Section 199) 재도입 검토

CHIPS 재검토를 통한 반도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

## 미국 외 생산기업 견제 정책

미국 수입품 대상 10-20% 보편관세 부과

생산기지 해외 이전 시 100-200% 관세 부과

해외 생산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제외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타국 생산을 견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주요 산업군 내 적대국 뿐 아니라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Industrials & Energy 주요 산업군



첨단 제조



자동차



광업 및 금속



Oil & Gas



전력 및 유틸리티



EPC

...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 대한 관세 인상, IRA 보조금 축소 및 전기차 전환정책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며, 미국 시장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임

## 미국向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 ▶ 보편관세 공약에 따라 중국 및 제 3국의 완성차에 의 관세 인상 예상

### ! 주요 시사점

한국 자동차 산업 내 미국 수출 비중은 '24년 (1~8월) 기준 약 52.2%로, 관세 인상으로 인한 韓 기업의 부담 증가 전망

## IRA 혜택 축소 및 전기차 전환정책 무력화

- ▶ 미국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축소 혹은 폐지 계획
- ▶ 그린 뉴딜,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계획

### ! 주요 시사점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의 강점 및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韓 자동차 기업은 전기차 판매 둔화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 우려





탈친환경 기조가 확산되고 저비용 에너지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타격이 우려되나, 국내 LNG·원자력 및 EPC기업은 사업기회 확보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친환경 정책 폐지 및 탈친환경 기조 확산

-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IIJA)' 폐지
- ▶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선언
- ▶ S&P 글로벌 청정지수 10% 하락 및 블랙록의 ESG 용어 폐기 등 미국 기업들 또한 탈친환경 기조 확산

### ! 주요 시사점

탈친환경 기조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 기회 감소

## 미국 내 저비용 에너지 생산 증대

- ▶ 석유 시추 증가 및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대상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 '화석연료 전도사' Chris Wright이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며 친환경 정책 폐지 및 석유·가스 생산 증대에 유리한 행보 예상

### ! 주요 시사점

국내 LNG 및 원자력 기업의 미국 내 수출 증대 및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가절감·재무구조완화 기대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및 원자력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한 국내 EPC 기업의 미국 내 사업기회 확보 가능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무역이 감소함에 따라 의 신규 발주 물량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나, 親화석연료 기조로 인한 운반선 수요 증가 및 MRO 분야에서의 사업기회 확보를 통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사료됨

## LNG·LPG 선박 및 MRO 수요 확대

- ▶ 미국의 親화석연료 기조에 따라 LNG·LPG 운반선에 대한 니즈 확대
- ▶ 트럼프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에 선박 수출 외 한국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요청

### ! 주요 시사점

화석연료 생산 증가 및 미국의 MRO 협력 요청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는 운반선과 MRO 분야에서의 신규 수주 물량이 확대되는 반사이익 기대

##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무역 감소

- ▶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이 추진됨에 따라 글로벌 무역 감소 전망

### ! 주요 시사점

국내 조선업체는 무역 정체로 인해 일부 신규 발주 물량 감소 우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산업관점에서 '새로운 미국 산업주의' 기조 아래 America First에 덧붙여 국가안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목적으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적대국 (Foreign Adversaries) 견제가 강하게 적용될 것임

### 1. 인공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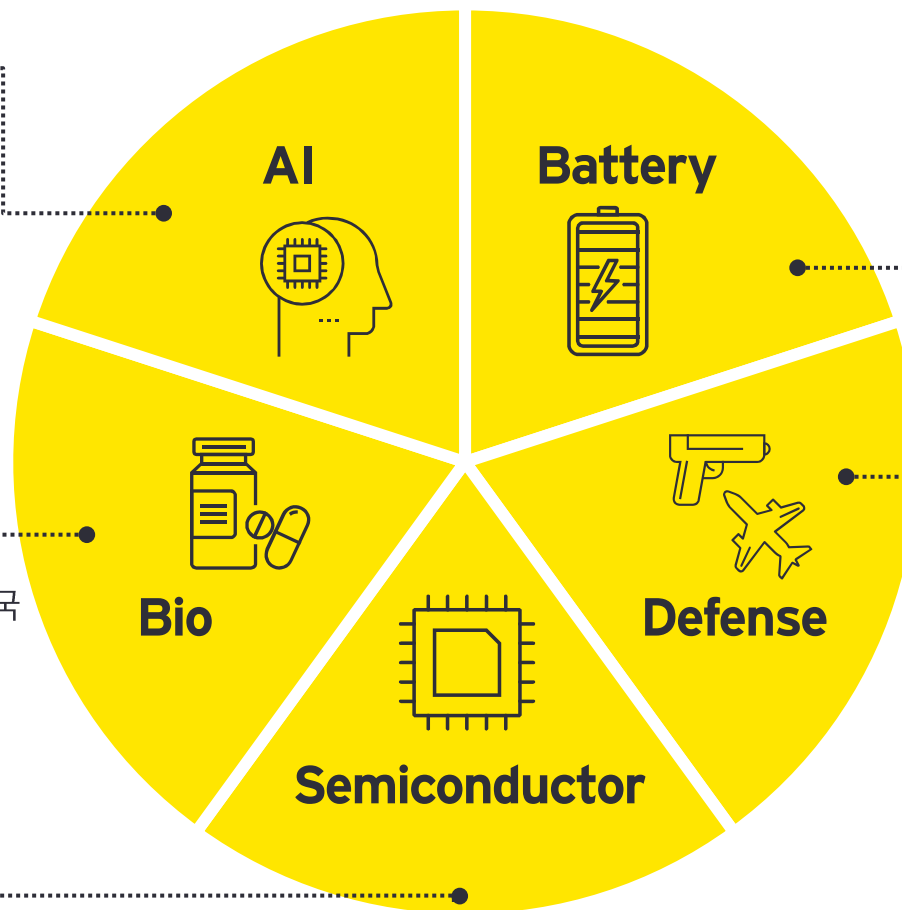
- ▶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 폐지를 통해, 미국 내 AI 산업 규제사항 대폭 제거
- ▶ 미 재무부 - 미국 내 자본의 "민감한 국가, Countries of concern" 대상 AI 투자 제제 행정명령 시행

### 2. 바이오

- ▶ 약가 인하, 필수약품 생산 자국화를 통한 미국 내 바이오 제약 산업 성장 유도
- ▶ 생물보안법 (BIOSECURE Act)의 법제화를 통한 중국 기업 직접 제재

### 3. 반도체

- ▶ 반도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대중국 규제 강화
- ▶ CHIPS 조항 일부 수정 또는 직간접 지원규모 축소



### 4. 배터리

- ▶ 중국 배터리 기업의 제3국 투자를 통한 IRA 우회 시도 차단

### 5. 국방

- ▶ 국방예산 증액을 통한 군사력 재건
- ▶ NATO 등 동맹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 Contents



## 1 Republican Trifecta에 따른 정책 추진 동력 획득

---

## 2 Trifecta 하에서의 정책 전망

---

## 3 산업계 영향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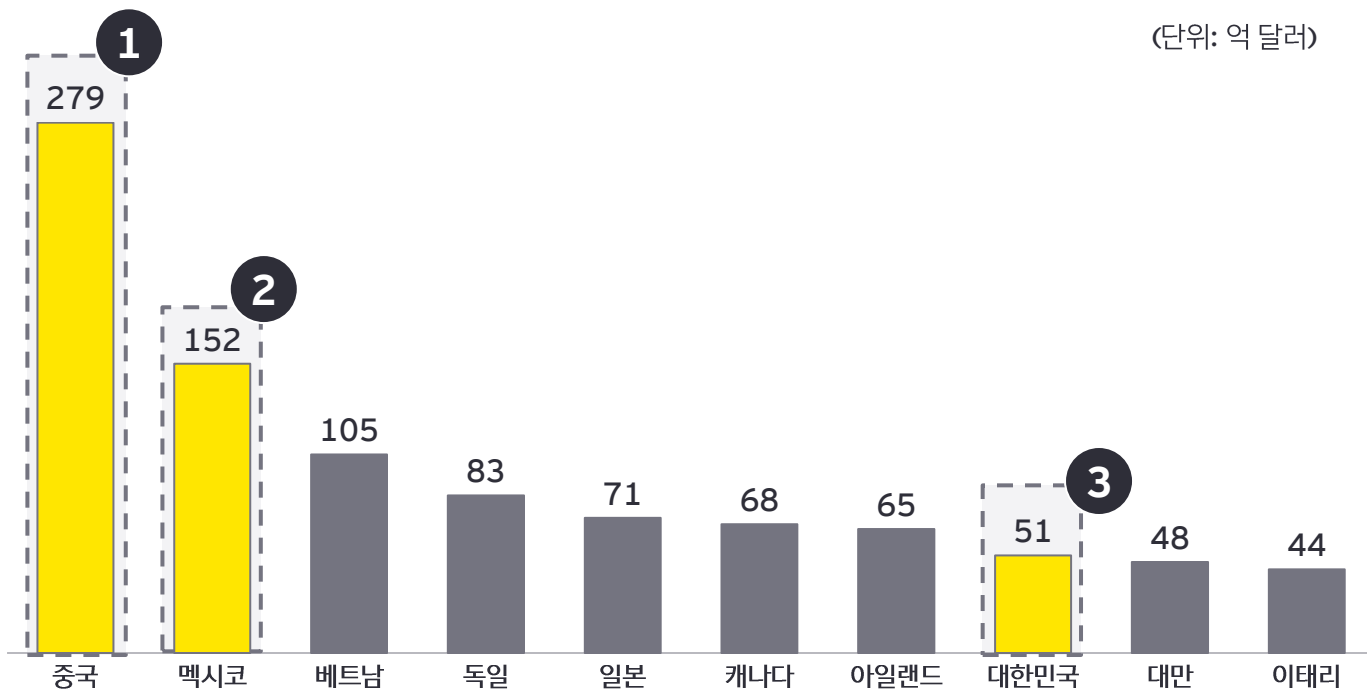
## 4 주요 국가별 반응 및 대응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중국, 멕시코, 한국을 대상으로는 MFN 조항 폐지, USMC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등 공격적인 무역정책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2023년 대미 무역 주요 흑자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조치는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을 주요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 높음

(단위: 억 달러)



## 무역정책 변화 전망



### 최혜국대우(MFN) 조항 폐지

-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PNTR)를 철회할 것을 제안함



### USMCA 개정

- ▶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며 무역 무임승차에 이용되는 멕시코를 겨냥한 USMCA 재협상 전망
  - ▶ '20년대비 '24년에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4.3% 증가한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약 7.7% 감소



### 한미 FTA 재협상

- ▶ '19년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외환시장 개입 억제가 논의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했으며, 재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 있음
- ▶ 미국은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을 지목하였으며, 해당 국가들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 있음

1) 모든 무역 상대국에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국제 무역 지위

2)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나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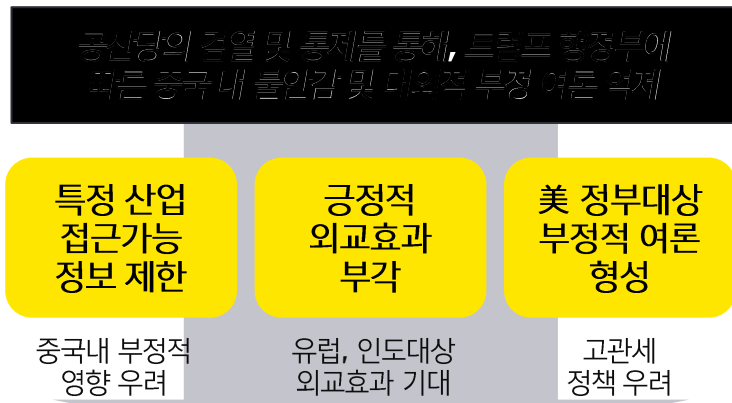
Source: EY Analysis

# 1 중국 반응 및 정책 변화 가능성

주요 국가별 반응 및 대응

중국 공산당은 미-중 갈등에 대응하여 부정 여론을 통제하고 있으나, 국제고립 탈피를 위해 외교 정책을 완화하고,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새로운 수출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당선 직후 중국 언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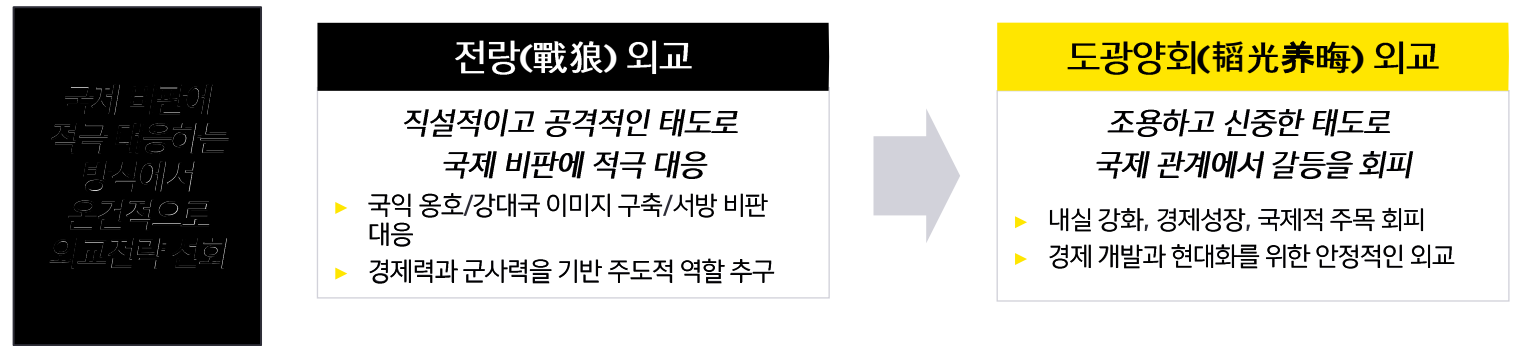
## 관련 중국 주요 언론 현황

“트럼프 당선으로 유럽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 기대” - 观察者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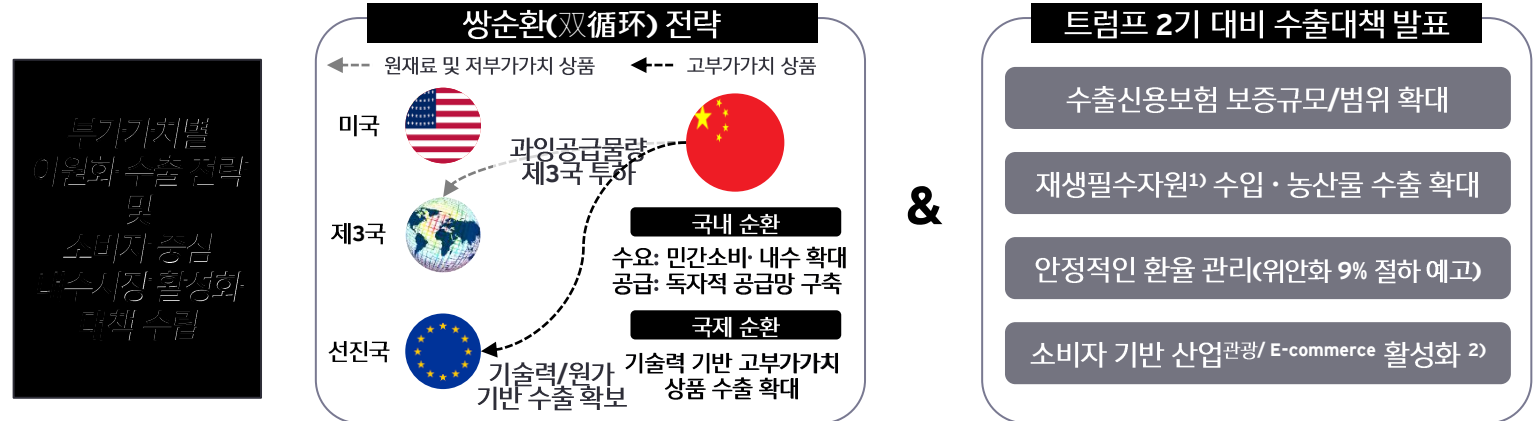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중국과 주변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 - 人人网 -

“고관세 정책은 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악영향을 줄 것” - 腾讯新闻 -

## 중국 주요 외교 전략



## 美 관세 위협 대비 중국 주요 수출 전략



1) 재생구리/알루미늄 등 산업기반자원대상 수입 지원; 2) 상호 비자면제협정 대상국 확대 및 E-commerce 대상 Cross-border 역량 강화

Source: TIMES OF INDI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ress Research, EY Analysis



# 1 중국 공산당의 자국 글로벌 기업 지원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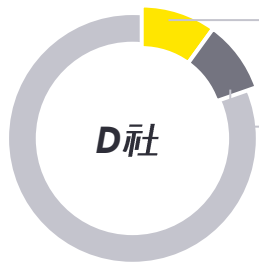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반응 및 대응

중국 공산당은 해외 기업 우회 투자를 통한 영향력 확대 및 복잡한 지분설계로 자국 글로벌 기업에 비밀리에 자금 지원을 해왔으며, 향후 이러한 행태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 지분 취득을 통한 영향력 행사로, 자국 기업 매출처 확보

[제조업]  
해외  
기업에  
대한 우회  
투자

### 대표사례 - 자동차 부품 D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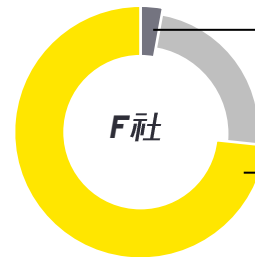


중국 국유 완성차 B社 - 9.98%

- ▶ 중국 베이징의 완성차 국유기업 B社 9.98% 지분 취득

G社 - 9.69%

- ▶ 9.69% 지분 소유자인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기업 G社 자동차 창업주 리슈푸 회장 소유 TPIL 투자



D社 AG - 3%

- ▶ '20년 F社 지분 3%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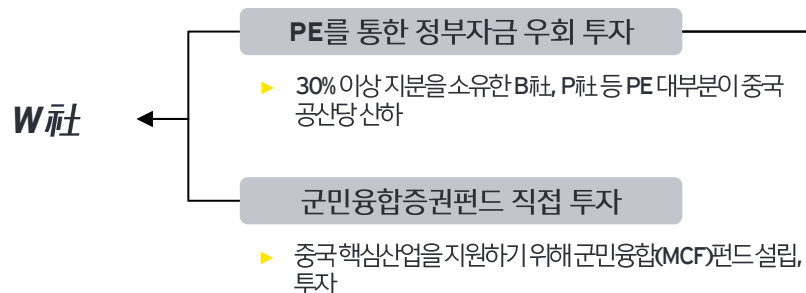
중국 자본 - 77%

- ▶ F社 25%를 제외한 77%가 중국 자본으로 구성

## 복잡한 지분설계로 공산당 및 고위직 지분을 위장하여 투자

[전략산업]  
자국 핵심  
기업에  
물밑지원

### 대표사례 - CRDMO W社



PE를 통한 정부자금 우회 투자

- ▶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B社, P社 등 PE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산하

군민융합증권펀드 직접 투자

- ▶ 중국 핵심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융합(MCF)펀드 설립, 투자

B社

27.3%

P社

8.4%

- ▶ Alvin Jiang (공산당 前 주석 Jiang Zemin의 손자) 설립
- ▶ Teamasek(싱가폴), 리카싱(홍콩) 등 파트너십을 통해 투자 진행

- ▶ 중국 국영기업 투자로 간부 마밍자가 1988년 설립
- ▶ 원자바오 총리에 도움으로 '99년 파산위기 극복 후 중국 2위 보험사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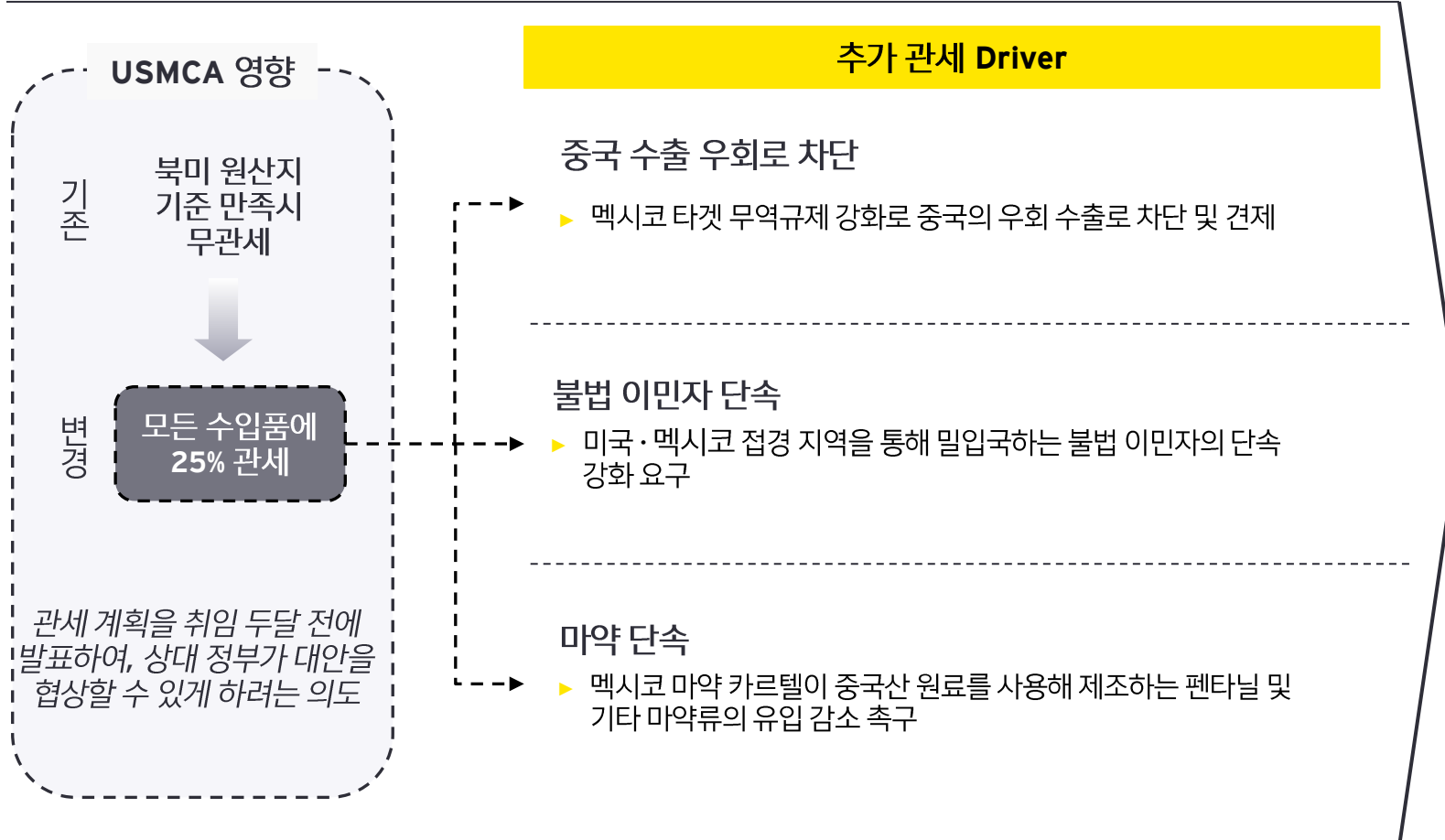
트럼프 정부의  
무역조치로  
심화 예상

## 2 멕시코 규제 사항 및 반응

주요 국가별 반응 및 대응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USMCA<sup>1)</sup> 재협상에 따른 자국 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내 중국 대상 조립/생산수요 감축 검토 및 美 대상 무역관세정책 제고를 검토 중에 있음

### USMCA 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



**USMCA 재협상**  
대비해 적극적 대응 중

### 자국내 중국발 설비/조립 생산 배제

- ▶ '26년 USMCA 재협상시 미국과의 우호적인 무역 협상을 위해 중국발 자동차 부품 설비/조립 배제를 촉구

### 미국 대상 무역관세정책 재고 요구

-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대상 관세 부과 논리 반박 및 미보호주의 관세 철회 요구

"관세가 부과되면 이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관세가 올 것이고, 이게 계속되면 공동의 기업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

-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24.11.26)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존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됨

Source: EY Analysis

### 3 한국 기업 기회 및 위험 요인

주요 국가별 반응 및 대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한국 기업의 소싱/제조 전반이 위기상황에 놓여 있지만, 대중국 제재 확대 기조로 인해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에 기회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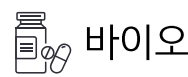
#### 대 중국 제재 확대로 인한 한국기업 기회 발생

미국 내 주요 산업 공급망 내에서 중국 기업이 배제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체 가능성 높음

핵심 영향  
산업군



AI



바이오



조선



방산

#### Opportunity & Risk에 따른 한국 정부/기업 대응 방향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한미 협력채널 적극 활용 및  
업계 의견 청취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의 미국  
내 생산기지 투자전략 재검토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 검토 및  
하이브리드 생산비중 확대  
검토

핵심 영향  
산업군



자동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원자재 수급] 측면에서 공급망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국산 원자재의 사용이 제한되며,  
[제조] 측면에서 미국 외 생산시설 활용이 제한되어 기존의 공급망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음

#### American First 정책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및 제조 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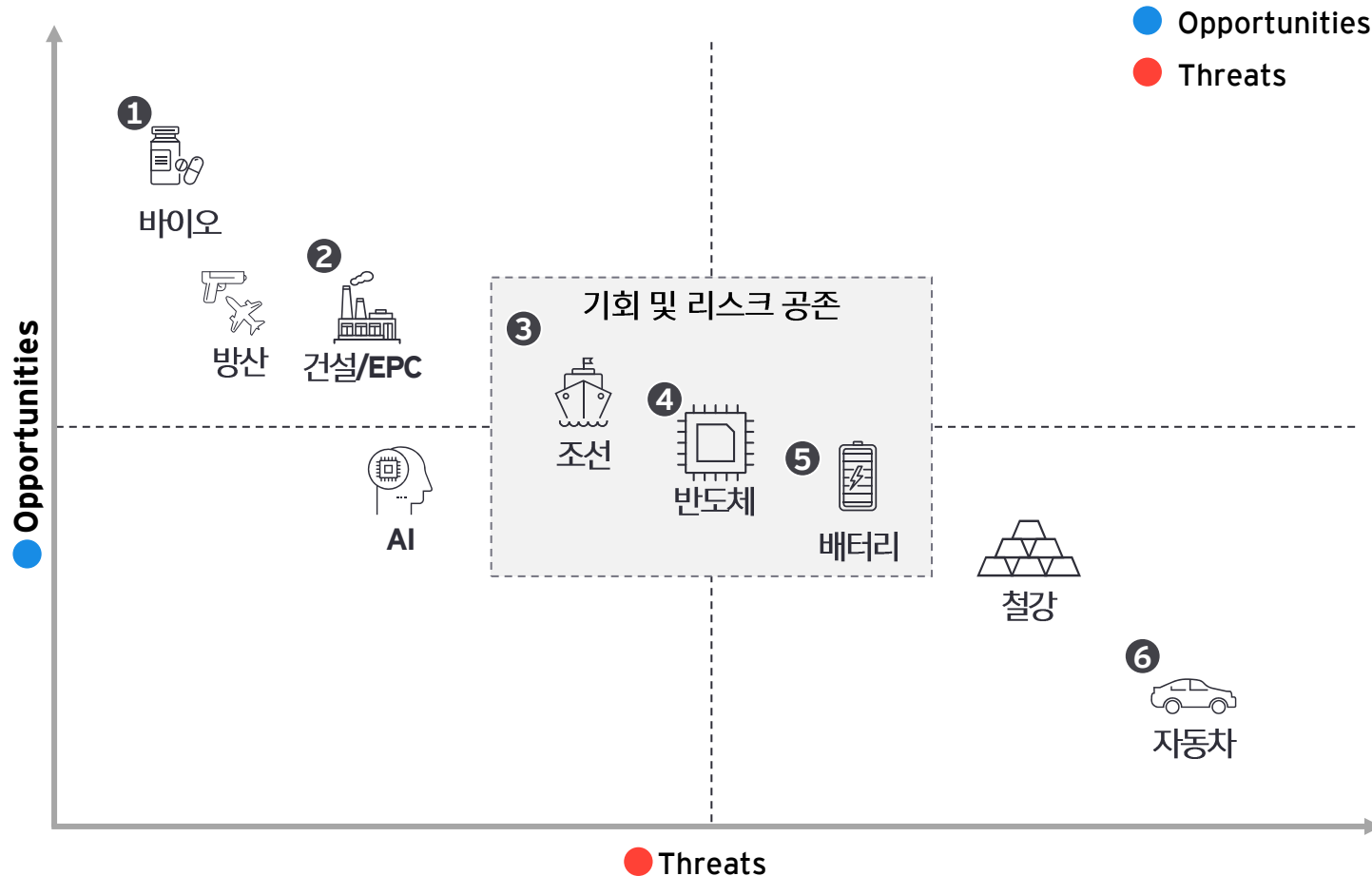
Opportunity

Opportunity & Risk가  
공존함에 따라 정부 및  
각 기업들은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중

Risk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위협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 대상 관세 정책에 따른 일정 수준의 반사이익이 기대됨

####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주요 산업 영향



####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

- |          |  |
|----------|--|
| 1 바이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을 겨냥한 '생물보안법'의 법제화로 인한 반사이익</li> <li>▶ IRA 폐지시 약가 인하 압력 완화</li> <li>▶ 바이오시밀러 및 CMO 시장 진출 기회 확대</li> </ul>             |
| 2 건설/EP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NG, 원전 관련 기업 기회 확대</li> <li>▶ 탈탄소 비용 부담 완화</li> </ul>  |
| 3 조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G, LNG 운반선의 신규 수주 물량 증가 기대</li> <li>▶ 보편적 관세에 따른 해운 물동량 감소 가능</li> </ul>  |
| 4 반도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IPS 법안 수정으로 보조금 축소 + 보편적 관세 가능성</li> <li>▶ 중국 대상 제재가 첨단 분야에 이어, 범용 분야로 확대 가능</li> </ul>                               |
| 5 배터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IRA 폐지 반대 (폐지가 아닌 축소 전망)</li> <li>▶ 전기차 수요 감소가 단기적으로 예상되나, 중국산 제품 60% 관세로 인한 국내 3사 반사이익 가능</li> </ul>    |
| 6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통한 추가 관세 가능성 높음</li> <li>▶ 일부 부품이 완성차 설치 전 미국-멕시코 국경을 여러 차례 통과할 경우, USMCA 조정으로 관세가 부과되어 비용 증가</li> </ul> |



# Contact Point

## EY한영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장  
전략컨설팅 리더 | 권영대 원장  
Young-dae.kwon@kr.ey.com

산업연구원  
실무 총괄 | 김광현 상무  
Kwanghyun.kim@kr.ey.com

## EY 전략컨설팅

전략컨설팅 | 이정훈 팀장  
Jeonghun.lee@kr.ey.com

전략컨설팅 | 유현성 팀장  
Hyunsung.yu@kr.ey.com

전략컨설팅 | 박재우 팀장  
Jaewoo.park@kr.ey.com

전략컨설팅 | 이원제 팀장  
Wonjae.lee1@kr.ey.com

##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https://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https://ey.com).

© 2024 Ernst & Young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APAC No. 05001194  
ED None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https://ey.com/kr)